

데스크 시국



윤영기
체육부장·편입부국장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7월 하순 광주시 광산구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 설립 추진단에 들었다. 최근 절명한 초등학교 교사를 추모하는 공간이 마련된 한편에는 메모지에 쓴 말이 빼곡히 붙어 있었다. 고통에 공명하는 교사들의 깊은 연대가 만가(萬家)를 대신하고 있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분노 가득한 목소리도 있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어도 겪었을 일기기에 더욱 마음 아프고 참담하게 느껴집니다." "신규 교사였을 때 1학년 을 맡았던 저로서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나 일수도 있었던 당신, 선생님이 이제 끝 나입니다."

악성 민원에 피폐해진 교단

추모의 벽면을 채운 교사들의 메모지 사이에 시민의 글은 보이지 않았다. 찾아오는 학부모도 없었다. '금쪽이'를 학교에 보내 놓고 교사에게 '금쪽' 같은 대접을 요구했던 부모의 외면. 교육 주체인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애도하지 않는 죽음. 한 교사를 사지로 몰아넣은 우리 자화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스쳤다. 그의 절명이 사적인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 타살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기에서 찾아야 한다...

교사의 심신을 피폐하게 만드는 사안은 단연 학부모

선생님들의 숨통이 막혀 가고 있다

악성 민원이다. 요즘 교사는 스승은커녕 어른 대접도 받지 못한다. 아이 문제로 전화해 욕박지르고 욕설까지 내뱉는 이들이 속하다. 특하명 아동 학대로 고발하겠다고 몰아붙인다. 과장이 섞일 수 있는 금쪽이의 학교 불평과 하소연을 내가 당한 모욕의 양 격분한다. 최근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설문 조사 결과 99.2%가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학부모 악성 민원' (49%)이 1위였다. 악성 민원은 교단에서 '학습된 무기력'이 자리하는 토양이다. 학교에서는 '눈을 15도만 돌리면 아무일 없다'는 말이 진리다. 학생 일탈을 모른 채하던 부모에게 시달리고 고통받을 일 없다는 얘기다.

광주의 한 초교 교사는 지난해 6월 교실에서 싸움을 한 학생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아동 학대를 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다. 광주지검이 지난 4월 무혐의 결정을 내리자 부모가 고검에 항고했지만 그마저도 최근 무혐의 결론이 났다. 그가 당한 고초를 가늠해 보기 위해 남을 청했으나 "그 일을 떠올리면 상처와 고통이 되살아난다. 지금도 약을 먹고 있다"며 양해를 구했다. 해당 교사는 사실상 1년 동안 수행 기간을 견뎌냈다. 형벌보다 더한 고통이었을 것이다. 아동 학대로 신고되면 교사는 학생과 분리 조치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위 해제된다. 교사에게 치명적인 교권 박탈이다. 한 원로 교사는 "남도 아닌 내가 가르치는 학생 일로 부모에게 고소당하면 배신, 모멸, 자괴감이 형언하기 힘들 정도다. 제자들을 예전과 같이 웃는 낯으로 가르칠 수는 없다. 평생 상처로 남는다"고 토로했다.

교사들은 극한 감정 노동에 시달린다. 말이 쉽지 제자의 학생부에 교권 침해를 적는 게 결코 간단하지 않다. 학교 폭력 사건도 마찬가지다. 스승으로서 제자를 가피해자로 나누는 일은 그 자체가 아픔이다. 학생부에 학폭 사실을 기록하는 것도 밤을 새워 고민할 문제

다. 제자 인생에 걸림돌이 될 주홍 글씨를 새겨 넣는 일이 쉬울까. 교사들이 제발 가르치는 일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소연하는 이이다.

교사 고충 이해하는 연대 절실

교육부와 정치권은 교권 강화를 위해 각종 법령을 손질하겠다고 설레발이다. 교사를 범죄자로 몰아세우는 아동 학대 처벌법을 손질하는 등 제도 보완은 시급하고 절실하다. 하지만 교권 침해 행위를 학생부에 기록하도록 명문화하고 학생 인권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은 신중해야 한다. 교단에서조차 논란이 적지 않다. 교권 침해 행위를 학생부에 기록하면 전철을 밟을 우려가 농후하다. 학교 폭력 학생부 기재 이후 학부모와 교사 간 법적 분쟁이 늘어난 전례가 말해 준다. 결국 교사를 상대로 한 법적 분쟁은 그치지 않고 법률 시장만 키울 것이다.

학생을 '통제의 대상'이 아닌 존엄한 인격체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학생 인권 조례는 부정할 수 없는 가치를 품고 있다. 교권과 적대적 시각에서 학생인권 조례를 바라보고 뜯어고치겠다는 윤 정부의 발상은 일차원적이다. 학생 인권 신장이 교권 침해의 본질이라는 주장도 전적으로 옳지는 않다. 논란을 예비한 사안인 만큼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등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다. 우선 발화점 높은 이슈보다 현장에서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소박한 일부터 찾아서 하는 게 낫겠다.

교사가 가르치는 죄로 목숨을 내놓는 세상이다. 이제 바뀌어야 한다. 그 변화의 힘은 우리의 깊은 공감과 연대에서 나온다고 믿는다. 숨진 교사는 '숨이 막혔다. 밥을 먹는데 손이 떨리고 눈물이 흐를 뻔했다'고 일기장을 적었다. 그 마음을 읽어 내는 데서 교단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지금 선생님들의 숨결이 가늘어지고 있다.
/penfoot@kwangju.co.kr

은편칼럼

여름 한 철 벌어 일 년을 먹고 산다고?



옥영석
농협경제지주 마트전략부장

휴가철이 한창이다. 출근길 지하철이 여유로워지고, 교통 체증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게 실감 난다. 설 세 없이 도끼질하는 것도 좋지만 도끼날도 갈아야 할 시간이 필요한 법이니 휴가 날짜를 제출했다. 그러나 막상 휴가 날짜가 다가오고 보니 행선지도 속도도 정하지 못하고 게으름만 피우게 된다.

아이를 성화에 여기저기 해수욕장이며 계곡으로 옷가지에 먹을거리, 텐트를 싸 들고 다니던 시절에는 기다려지던 여름휴가가, 아이들이 크고 나니 재미가 없어졌다. 무엇보다 비용이 만만찮아 부담이다. 어지간한 바닷가 원룸 펜션 하루 숙박비가 20만 원이 넘고, 밥을 지어먹으면 모를까 어지간한 횡집이나 식당에서 4인 가족 하루 식대로는 숙박비 이상을 지불해야 한다. 거기에 각종 입장료며, 놀이 기구, 기름값, 통행료를 계산하면 2박 3일 휴가비로 100만 원이 넘게 들어간다

니, '베케이션플레이션' (Vacation + Inflation)이라는 말이 실감난다. 그럴 바에야 일본이나 베트남 등 동남아로 가자는 친구들도 있지만 더위에 더 더운 나라까지 가서 설레발치고 싶지도 않다.

지난달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조사한 '농촌관광 대국민 인식 조사'를 보면 우리 국민들은 세 명 중 두 명이 넘는 68%가 농촌 관광에 대해 호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자연 풍경 감상' (41.5%), '이색 체험 즐길거리' (30.6%), '맛있는 음식' (10.6%)을 들었다. 농촌 관광을 선호하지 않는 32%의 사람들은 '관광 인프라 부족' (27%), '불편한 교통 접근성' (18.1%), '바가지 등 높은 물가' (17.7%) 등을 지적했다.

또한 국민이 체감하는 농촌 관광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물가 수준'이 높다는 의견이 60.8%로 가장 두드러졌다. 이는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동남아시아 등 물가가 저렴한 지역으로의 여행이 활발해지고, 최근 엔저 현상으로 일본 여행이 급증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국내 관광지 물가에 대한 체감도가 커졌기 때문일 것이다. 연령대별로 20대와 30대는 '쾌적하고 안전한 숙박 시설', 40대에서는 '지역 물가 및 관광 요망'을, 60대 이상은 '자연 경관 및 볼거리'를 농촌 관광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그들은 또 개선 과제로 '숙박·식당·교통·주차 등 시설 인프라가 확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43.1%로 가장 많았고, '관광지 바가지요금을 근절해야 한다'는 응답이 37.1%로 뒤를 이었다. 그 밖에도 '농촌 관광에 대한 정보 안내 등 홍보 강화'와 '지역 축제, 이색 체험 등 관광 콘텐츠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몇 달 전 주말 예능프로그램에서 불거진 전통 과자 바가지가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전국 어느 시장에 가나 살 수 있는 전통 과자 세 봉지를 14만 원에 구입한 것을 두고 소고기보다 비싼 옛날과자라는 비난이 일자, 해당 지자체가 사과에 나섰지만 전 국민의 뇌리 속에서 잊혀지려면 십 수 년은 걸릴 일이다.

우리 고장이라고 예외는 아니었다. 전국적으로 너무나 잘 알려진 지역 축제 현장을 방문한 일본의 유튜버에게 여백 한 그릇에 만 원을 받던 상인은 5000원어치는 팔지 않는다고 답했다. 61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그녀는 결국 번데기와 소세지가 4000원씩에 사먹으며 '번데기 축제'라고 예뻐 말했더니 미안해 해야 할지 고마워해야 할지 모르겠다.

유원지나 휴양지 등에서 관광업이나 요식업을 하는 것을 두고 여름 한 철 벌어 일 년 먹고 산다는 말이 있지만 모든 게 실시간 중계되는 요즘엔 동네 망신, 지역 민폐가 될 뿐이다.

기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하는 동화 구연



이경옥
동화구연가

동화 구연(口演)을 만난 지 20년이 지났다. 구연을 하고 있으면 살아있음을 느낀다. 남녀노소 누구나 구연을 좋아하지만 특히 어린이들에게 들려주었을 때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빛과 적극적인 호응을 받으면 어찌나 행복인지 모른다. 무엇보다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나는 그림책, 동화책과 늘 함께 한다는 사실이 행복하다.

최근에는 동화 구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아이들에게 직접 동화를 읽어 주기 위해 배우는 사람들이 있고, 동화 구연 지도사가 되기 위해 지역 도서관 등에서 좀 더 체계적인 교육을 받는 이들도 늘었다.

우리나라에서 동화 구연가로 대표적인 사람이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다. 그는 일제 강점기 때 어린이들에게

을 통해 연출한다는 의미로, 임으로 재미있게 들려주는 동화'(엄기원·1997)라고 정의된다.

동화 구연은 동화를 음성 언어로 개작하여 적당한 음성 연기, 몸짓과 표정으로 동화 내용의 전달에 효과를 높여 주는 예술 행위이자 구연자와 청자가 문학 작품을 통하여 서로 감동을 주고 받는 활동이다.

동화 구연을 배우려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각 지역 도서관에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동화 구연 지도사 과정을 열고 있다. 강의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많은 동화 구연 지도사들이 배출됐다. 어떤 사람들은 색동회 후배가 되어 동화 구연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어떤 사람들은 동화 구연 동아리를 만들어 지역 사람들을 위한 봉사도 진행하고 있다. '동화 구연'이 매개가 돼 누군가의 인생이 새로운 길로 접어드는 현장을 보는 건 행복한 일이다.

필자는 서구 상록도서관과 나주 시립도서관 등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곳에서도 동화와 그림책을 사랑하고, 동화 구연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만난다. 누구나 배울 수 있고 누구나 즐길 수 있으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동화 구연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한다.

社說

지역 간 갈등 부추기는 '갈라치기' 지양해야

광주·전남 정치권과 지자체에서 핵심 현안을 놓고 서로의 이익에 따라 지역 간 갈등과 대립을 부추기는 듯한 행태가 잇따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남도의회 신민호 의원은 지난날 임시회 기간 중 열린 기획조정실 업무 보고 과정에서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은 광주(지역 대학) 출신이 88%, 전남 출신은 단 1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처럼 지역 인재 채용제에도 불구하고 전남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며 전남 몫을 사수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러한 주장은 전남 출신 인재가 광주 소재 대학을 졸업한 뒤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취업한 경우가 적지 않은 데도 지역 인재 범위를 너무 협소하게 설정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상생을 기반으로 한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조성 취지를 외면한 채 지역을 갈라치기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남 지역 국립 의대 설립은 아직 확정

되지 않았음에도 전남도의회를 중심으로 순천과 목포에서 경쟁적으로 유치 토론회를 열면서 소지역주의를 부추기는 현안으로 좁히고 있다. 광주군 공항·민간공항 이전과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문제도 지역 이기주의로 인해 갈등만 반복하며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역의 싱크탱크인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이 통합 운영 12년 만에 끝내 재brand된 것도 '초광역 협력' 추세에 어긋난다.

이웃한 자치단체끼리 협력을 외면하고 자기 지역의 작은 이익만 고집하며 경쟁과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소탐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지역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더욱이 광주와 전남은 청년 역사를 함께하며 의왕의 대의를 지켜온 한 뿌리 공동체이다. 현시대의 대의는 상생에 바탕으로 한 지역 발전과 미래 개척이다. 광주·전남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눈앞의 이익을 탐하기보다 양 지역 공동 발전을 위한 지혜를 모으고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조폭 등과 결탁된 불법 문신 시술 엄단

몸 전체에 문신을 하는 일명 '조폭 문신' 시술이 광주·전남에서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성년자인 10대 청소년 30여 명이 폭력 조직에 가입하기 위해 전신 시술을 받았다. 이 가운데 네 명이 실제로 폭력 조직에 가입했고, 1000만 원 상당의 시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감금·공갈 범죄까지 벌였다. 여전히 전신 문신이 폭력 조직에 가입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처럼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광주지방경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는 그제 광주·전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A씨 등 문신 시술업자 12명을 의료법 위반과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4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00여 명에게 불법적으로 문신 시술을 해 주고 25억 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직 폭력 단체 조직원 128명(미성년자 32명 포함)도 이들에게 전신 문신 시술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문신 시술업자들은 또한 폭력 조직과 호응호제를 하고 경조사를 챙기는 등 밀접하게 결탁한 정황도 드러났다. 한 시술업자는 의료용 마약(펜타닐)을 업소 내에 비치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문신 시술업자들은 불법 시술로 벌어들인 수익을 가족 명의 계좌로 옮겨 아파트와 고가 수입자 구입 등에 사용했다.

폭력 조직 등과 결탁된 불법 문신 시술은 근절되어야 한다. 불법 문신 시술을 매개로 공생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범죄 조직과 문신 시술 업자간 연결 고리를 끊어야 한다. 더욱이 미성년자들이 폭력 조직에 가입하기 위해 전신 문신을 하는 행태는 심각한 문제다. 시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범죄까지 저지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문신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타부(문신) 양성화'에 대한 법사회적 논의도 필요해 보인다.

無等鼓

장마는 6월 하순에서 7월 하순의 여름에 걸쳐서 동아시아에서 습한 공기가 전선을 형성하며 남쪽으로 오르내리면서 많은 비를 내리는 기상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 시기를 장마철이라고 부른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장마철이라고 하지 않고 우기(雨期)라고 한다. 한반도에 연일 물 폭탄을 쏟아냈던 장마철이 이제 끝났다고 한다.

그런데 당분간 강한 소나기가 전국 곳곳에 내린다고 하니 장마가 끝난 것인지, 지속되는 것인지分辨할 수 없다.

장마

이런 장마 또한 기존 장마와 다른 패턴을 보이면서 기상 당국과 정부가 곤욕을 치렀다. 냇다 폭우를 쏟아냈다가 햇볕이 쨍쨍한 폭염으로 이어지는 오락가락 패턴을 보인 것이다. 이때문에 이런 장마를 '도깨비 장마'라고 부르기도 했다.

올해 장마 기간 강수량은 648.7mm로 집계됐다. 기상 관측망이 전국으로 확충된 1973년 이래 3번째로 많은 수치다. 특히 국내 연 강수량의 30% 이상이 옛세 만에 쏟아지기도 한 이례적인 역대급 장마라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그만큼 올해 장마는 '집중 호우'가 많았다.

이렇게 중 잡을 수 없는 장마 탓에 기상청도 지난 2008년부터 공식 장마 시작일과 종료일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장마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집중 호우가 곳곳에서 내려 호우 피해를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간 장마가 끝나고 장마에 버금가거나 장마철보다 더 많은 비가 내리는 경우가 속출했다. 이 때문에 '장마'라는 단어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상청과 기상학회 등에서 이러한 움직임에 보이고 있다고 한다. 기후 변화 여파로 중잡을 수 없어진 상황에서 장마를 대체할 새로운 용어를 찾고 있다는 것이다.

순우리말로 500년 전부터 쓰였던 장마라는 단어가 기후 변화 위기로 사라진다는 점이 아쉽게는 하지만, 이제는 기후 변화로 인한 홍수, 폭염 등 돌발적인 자연 재난에 적극 대비하는 정책들이 필요할 때인 것으로 보인다.

/최권일 정치부 부국장 cki@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주간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